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61호 / 11월 1일

중국경제 ‘붕괴론’의 실상과 허상

1. 개요

- 최근 중국 國民經濟研究所 판강(樊綱) 소장이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『崩壞論과 中國經濟』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, 그 내용을 요약·정리함.
- 판 소장은 붕괴론은 일부 서방학자들이 중국경제의 모순만을 부풀려 만든 허구에 불과하지만, 차제에 중국은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·분석을 통해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함.
- 또한 붕괴론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, 이것들의 실제 위험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제시함.

2. 체제전환기 개도국으로서의 과제

-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, 첫째는 개도국의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는 농촌문제(3농 문제), 빈곤, 실업, 소득격차, 부패, 법제도의 미비 등이며, 둘째는 전환기 국가의 공동과제인 국유기업, 국유은행, 계획통제, 정부구조 및 행정시스템의 문제 등임.

-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복잡한 사유화 절차, 불량채권 등 주로 체제전환국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음.
- 그러나 중국의 경우,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쉽게 가시화된다는 특징이 있음.
- o 예를 들어 부실채권, 실업 등은 다른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, 중국은 그 규모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임.
- 상기 문제들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바, 50~70년이 걸려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유럽 등 선진국이 300~400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얻는 것이므로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.
- 중국경제 붕괴론자들은 중국이 체제전환국의 문제와 개도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으나, 반대의 논리도 가능함.
- 즉 중국이 직면한 과제가 하나가 아닌 두 개라는 사실은 오히려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경제발전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.
- 또 동유럽이나 러시아의 경우 개혁 이전 이미 공업화와 국유화에 도달했기 때문에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하지만,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제 중심이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됨. 즉 집단간 이해충돌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덜 심각함.

3. 금융 및 재정위기의 가능성

- 금융권의 불량대출 문제는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안이고, 중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.

- 현재 중국 은행의 불량대출은 채무총액의 25~26%, GDP의 26~27%를 차지함.
- o 자산관리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은행권의 불량채권을 합치면 GDP의 40%에 달하므로 그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임.

□ 그런데 중국의 불량채권은 국유은행이 정부 지시에 의해 국유기업에 대출한 일종의 ‘국채’ 성격을 갖고 있음.

- 따라서 은행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갖고 있어도 이는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일반고객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.
 - 현재 중국의 순수한 정부채무는 GDP의 16%로 개도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일부 선진국(이탈리아는 90%, 일본 150%)보다도 상당히 낮음.
 - 중국의 정부채무 비중이 낮은 이유가 바로 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, 은행에 지시하여 국유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였기 때문임.
 - 한편, 중국은 외채의 對GDP 비중도 상당히 낮은 15%이고, 이 중 단기외채 비중은 1%에 불과함.
 -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과 태국의 단기외채 비중이 30~40%였음을 고려하면 중국은 단기외채의 상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.
 - 게다가 장기외채를 포함해도 정부채무의 대GDP 비중이 70~72%에 불과하여 국가재정 건전도가 국제기준내에 있음.
- 일부에서는 중국 국내은행의 신용경색 기미를 이유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.

- 중국에서 일부 신용경색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불량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며, 대출시스템 개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.
- 또한 중국의 신용경색은 내부적인 금융개혁에 기인한 반면, 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은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노출, 즉 외부적인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.
- o 2,3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충분히 완충시킬 수 있을 것임.

□ 그러나 1997년 하반기이래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은 금융개혁과 신용경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.

- 디플레이션의 해소를 위해서는 은행이 기업 특히 對민간기업 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하나,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.
- o 현재 비국유기업의 생산액은 GDP의 70%를 차지하지만, 전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%에도 미치지 못함. 반면 생산액의 GDP내 비중이 30%에 불과한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은 70%를 차지함.

□ 은행 불량채권의 해결 방안은 엄격한 기업개혁을 통해 신규 부실채권을 최대한 억제하고, 경제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.

- 현재 불량채권의 비중은 GDP의 40% 정도인데, 이 정도면 위험한 수준은 아님.
- 따라서 향후 불량채권의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연 8%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면 약 7년 후에는 부실채권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.

- 만일 연간 7%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는 3~4년 후로 앞당겨질 수 있음. 결국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을 해소하는 정책임.
- 한편, 일부 해외학자들은 중국이 정부재정에 의지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.
-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국채발행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사실이나,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점차 정부투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.
- 과거 중국정부는 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모두 책임지는 바람에 재정에 부담을 가져왔음. 앞으로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조정과 사회복지 등 정부의 고유업무에만 집중해야 함.
- 현재 재정적자는 GDP의 2% 수준에 불과하므로 국제기준인 5%까지는 여유가 있음. 중국이 매년 7~8%의 성장을 지속하고, 작년도 세수증가율도 20%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.

4. 소득격차, 3농(농촌, 농업, 농민) 및 지역격차

가. 소득격차와 절대 빈곤화

- 경제개혁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음. 소득격차 심화, 실업증가, 범죄율 상승 등이 그것임.
- 소득격차의 심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함.
-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개혁과 발전으로 절대빈곤 인구를 크게 감소시켰음.

현재 약 2,0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데 이들에게는 정부의 특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.

- 그러나 사회적으로 절대빈곤의 감소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증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.
- 그러나 개혁은 바로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절대평균주의를 해소하는 것임. 소득차이가 없다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 것임.
- o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면 조정해야 되지만, 그 과정을 부정할 수는 없음. 중국은 향후 20~30년 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임.

□ 붕괴론자들은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중국이 내분을 겪을 것이라고 예견하는데, 절대빈곤을 해결하면 사회불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.

-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의 정리해고자가 2,500만 명, 집계기업의 그것이 4,000만 명에 이름. 이처럼 거대한 빈곤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임.
- o 또한 이들 정리해고자는 대부분 젊은 시절 절대빈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음.
- 따라서 절대빈곤인구를 줄이고, 추가적으로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면 사회안정은 유지될 수 있음.

나. 도농격차와 3농(농업, 농촌, 농민) 문제

□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결국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임.

- 현재의 농업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중국 농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. 향후 40~50년내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 가량인 4~5억 명을 비농업인구로 전환해야 함.

- 3농 문제의 해결은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.
- 일부 국내 인사는 중국이 과학기술대국을 지향해야지 저부가가치 제품이나 양산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임.
- 중국은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수억 명의 농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, 취업문제는 하나의 도시,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.
- o 중국은 산업구조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, 절대로 초급산업을 대체할 수는 없음.

다. 동서부 지역격차

- 연해지역과 서부내륙 지역의 경제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순전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며, 그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음.
 - 중국의 어느 성, 자치구도 빈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독립하려는 경우는 없으며,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통일을 원하는 다민족 국가였음.
 - o 역사적으로 민족간 모순이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유가 경제에 있지는 않았음.
- 홍콩과 광둥성의 관계에서 보듯이 선진 지역과 낙후 지역은 서로 보완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해 왔음.
 - 인구 이동의 활성화 추세도 지역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. 내륙 지역의 GDP가 낮기는 하지만, 외지에서 이전된 소득을 포함하면, 즉 GNP 개념으로 소득을 추정하면 GDP로 추정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.
 - o 다시 말해 서부지역의 경제수준은 적어도 통계상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양호함.

□ 한편,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서부개발 투자가 단지 수요가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비판하고 있음. 이들은 정부가 연해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
- 그러나 연해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는 수익성이 있으므로 굳이 정부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지만, 서부의 경우 정부투자가 불가피함.

- 정부투자를 통해 자원배분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,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동서부간 지역격차는 해결 가능한 과제임.

(***)